

보도시점 2023. 6. 5.(월) 조간 배포 2023. 6. 2.(금) 15:00

성년후견인,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.

-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-

- **[배경]** 후견인이 은행 방문시,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후견인의 권한상 처리가능한 업무임에도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 지속 발생
- **[내용]**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, 은행직원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, 주요 업무에 대한 처리방식 등을 정리
- **[향후계획]** 은행·후견업무 관련기관 대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강화

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,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,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*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「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(이하 ‘매뉴얼’)」을 마련하였다.

* [참여기관]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, 서울가정법원, 사단법인 온을

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, '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.5% 수준이나, '25년에는 20.6%로 상승하여 ‘초고령사회’**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, 질병,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‘성년후견제도’의 이용도 증가**하고 있다.

*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, 고령화사회(7%), 고령사회(14%), 초고령사회(20%)로 구분 (우리나라는 '00년, '08년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진입)

**** 후견사건 접수건수 추이** (출처: 법원행정처 사법연감)

연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건수	<u>1,883</u>	3,748	4,674	5,410	7,033	8,359	9,585	11,094	<u>11,545*</u>

※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 11,545건 중 인용건수는 8,575건임 (74.3%)

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'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*되었다.

*** 후견제도의 구분**

1. 연령에 따라 '미성년후견'과 '성인에 대한 후견'으로 구분
2.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'법정후견'과 '임의후견'으로 분류
3. 법정후견을 대리범위 등에 따라 '성년후견', '한정후견' 및 '특정후견'으로 재분류

다만,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,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(1)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, (2)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, (3)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

이에, 금융당국, 은행연합회, 서울가정법원,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,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, 예금 계좌 개설·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·응답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.

우선,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'후견등기사항증명서'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,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.

예를 들어, 법정후견 중에서 '성년후견'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,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, '후견등기사항증명서'에서 '대리권의 범위'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.

다음으로,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하였다.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, 부동산 담보제공 등 ‘후견등기사항증명서’에서 ‘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’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, ‘후견등기사항증명서’와 더불어 ‘법원 심판문 정보’를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마지막으로,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, 예금계좌 개설·해지·만기시 처리, 계좌이체·자동이체 신청, 담보대출·신용대출 신청,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·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, 이와 관련하여 질의·응답을 추가하였다.

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,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,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·상담·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.

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(별첨)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주요 Q&A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주식 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2-2100-2631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준환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은성 (02-3145-8030)
	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본부장	지순구 (02-3705-5150)
		담당자	부 장	박혜정 (02-3705-5040)
	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	책임자	과 장	고기철 (02-2055-715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현덕 (02-2055-7447)